

# 부동산 '바짝' 얹드린 與... "오만과 무감각에 국민께 상처"

### 재보궐 앞두고 서울·부산 열세에 저자세 읍소 나서 김종민 "정부·여당 똑똑한 척 했다...진심으로 사죄" 양향자 "용서 구한다"...박정 "심판 코로나 극복 후"

더불어민주당은 29일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며 저자세로 몸을 한껏 낮췄다. 민주당은 집값 폭등으로 인한 전세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까지 이어져 온 부동산발(발)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선거 초반부터 '더 겸손하게', '더 절박하게' 구호로 겸손 모드를 취해왔다.

재보궐선거가 열릴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판세가 민주당에 불리하자 "오만과 무감각에 국민께 상처를 줬다"며 읍소 전략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22~26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2516명 응답 완료, 응답률 6.4%,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p) 로 실시한 3월 4주차 정당 지지도 추

간 집계결과 국민의힘은 39.0%, 민주당은 28.3%로 양당 지지도 격차는 10.7%였다. 조선일보·TV 조선이 공동으로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실시한 서울·부산시장 후보 지지율 조사 결과(27일, 서울·부산 만 18세 이상 803명 대상, 서울 응답률 25.3%, 부산 응답률 25.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5%p) 국민의힘 후보가 모두 20% 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에서 "결과적으로 집값 잡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믿고 따랐다가 손해 봤다는 분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도 정책이지만, 더 심각한 건 우리 정부·여당의 잘못된 자세와 태도였다"며 "부동산 폭등 현실에 대해 우리 정책이 옳다, 조만간 효과가 있을 것이다, 특정 지역의 일시적 문제라는 식으로 대응해왔다. 현장은 하루하루 절망적 상황이 펼쳐지는데 우리는 할 일 했다는 식으로 똑똑한 척만 했다. 이런 오만과 무감각이 국민 마음에 상처를 줬다"고 고개를 숙

였다. 이어 "정책 방향도 뿌리부터 점검해 근본적으로 부동산 개혁의 길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부동산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당에 공식 제안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은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에서 아쉬움과 광역단체장들의 성취론 문제 등 잘못과 무능에 대해 진솔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이어 "국민의 꾸짖음에 귀 기울여야 한다. 재집권을 목표로 한다면 솔직함으로 접근하고, 유능함으로 승부해야 한다"며 "담대하게 용서를 구하고, 솔직하게 마주할 용기만 있다면, 국민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지금 심판이 아닌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며 "심판은 코로나19 극복 후에 냉철하게 받겠다. 정부와 여당의 노력에 한 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했다. 김종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한다. 시장의 문제를 시장의 방식으로 풀려고 했던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면서도 "근대 오세훈 서울시장 되면 또 민간에 맡겨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 완전 투기 난장판을 만들겠다는 거다. 막아야 한다"고 적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 '퇴임' 김상조 "실망 드려 죄송 물러나는 것이 마지막 역할"



'전셋값 인상' 논란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김상조 청와대 전 정책실장은 29일 "부동산 투기근절 위해 총력 기울여야 할 이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청와대 정책실을 재정비하여 2·4 대책 등 부동산 정책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을 모시는 비서로서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 후임으로는 이호승 현 경제수석이 발탁됐다. 김 실장은 이어 "그래도 다행인 것은 신임 정책실장이 탁월한 능력과 훌륭한 인품을 가진 분이어서 제가 다하지 못한 일을 잘 마무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송구하고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실장에 이어 연단에 오른 이호승 신임 정책실장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3가지 정책과제에 집중하겠다"며 "첫째,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조기에 일상을 회복하고 둘째, 기술과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며, 셋째 그 과정에서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과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가진 능력과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자신감 있게 미래로 나아가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뒷받침하고 싶다"고 전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임대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 이틀 전 자신이 보유한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셋값을 14% 넘게 올린 사실이 알려지며 구설에 올랐다. 청와대 측은 김 전 실장이 전세로 살던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 보증금이 오르면서 청담동 세입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올려받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부동산 부패 청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최재형(왼쪽부터) 감사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문 대통령,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 입시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보호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본회의 통과

### 서동용 의원 "교육신뢰 회복 위한 밑거름 되길 바라"

서동용 국회의원이 입시·사학비리 등 교육현장의 부패와 비리를 신고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표발의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는 공익침해행위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행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입시·사학비리 등을

신고한 제보자가 학교나 학교법인의 부당한 보복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 충암고등학교 급식비리를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한 충암교 교사, 하나고등학교의 입학비리를 알린 교사는 담임에서 배제되는 보복조치를 받았고, 급급 요구를 거절한 교사가 해

임 징계를 통보받은 명진고 사례는 교육현장의 공익신고자가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으로 사례이다. 이에 서동용 의원은 구체적인 공익 침해행위의 대상 법률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근로기준법'을 추가하여 국·공립, 사립 초·중·고·대학의 교원이 공익제보자 보호 대상에 포함됐을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임직원이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하여 서동용 국회의원은 "그동안 입법 미비로 학내·외 비리를 공익제보한 교직원들이 학교나 재단으로부터 부당한 보복을 받아오게 되어 보호받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기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되길 바라며 나아가 교육신뢰 회복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 직통전화 010-2400-7774  
☎ 주문팩스 062-946-0053